

민생고통지수는 이미 위기 수준이다



경제포커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최근의 민생의 고통지수는 위기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고통지수(misery index)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고통지수는 백악관 경제학회의 의장을 지낸 아서 오코 예일대 경제학 교수가 주장한 지수다. 오코는 ‘오코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다. 오코의 법칙은 실업률 1%를 낮추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4%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고통지수가 8.8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실업률 2.7~2.8%는 문재인 정부 이래로 지속되어 온 재정주도 단기일자리 양산으로 실제 경제상황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비탄력적인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무수한 반기업·친노조 정책에다 폭증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큰 정부 정책 등으로 연간 평균 30만~40만명 증가해 오던 취업자 증가수가 2018년 9만명대로 급락하자 부랴부랴 재정을 쏟아 붓는 재정주도 단기일자리 양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되므로 단기일자리 양산으로 실업률은 실제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확장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5월 확장실업률은 10.7%다. 이를 5월 물가상승률 5.4%와 합하면 고통지수는 16.1이 된다. 이는 1998년의 환란 수준이다.

민생이 이 정도로 어려워면 국민의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교체도 일어난다. 영국에서 1979년 마거릿 대처 총리의 보수당 집권, 미국에서 1980년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 등이 모두 2차 석유과동과 엄청난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도란이 주된 배경이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11월 중간선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고통지수가 지금처럼 상승하는 경우 2024년 4월 총선이 여야 혼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상승 대책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향이 있지만 높은 실업률 충격도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선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만 투자 소비 위축 등 실물경제 충격이 큰 것임은 물론 한국처럼 민간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부실이 증가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2022년 1분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달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우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 1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59조4234억원으로 금리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1분기 잔액기준 77.3%에 달해 금리가 1%p 오르면 연간 약 14조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위험 부실기업의 부실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5월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가 6.0%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남중수 기자

실업률·물가상승률·국가채무액 등 연일 최고치 갱신 유가·전기료까지 들쭉... 금리인상은 신중히 추진을

국제곡물 가격 상승 및 중국 봉쇄와 해운 물류 차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이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여전히 낮은 생산성에 높은 임금상승세 지속, 탈원전 등 누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따라 불가피한 전기 가스 수도 등 관리물가 상승, 광범위한 외식비 등 서비스물가 상승, 국내자급률은 하락하고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잇따라 내리고 있는 확대 재정지출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부분 공급측 요인들이다. 공급측 요인에도 금리인상하는 경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겠지만

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이 중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약차주 수도 31만6000명에 이르고 있다.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빠르게 부실이 증가해 금융부실로 전이 우려가 크다.

금리인상이 부동산가격 하락을 초래해 부동산대출 부실 등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도 있다. 공급총력 물가상승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근본적 원인 해소에 주력하는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 금리인상은 기업부실 투자소비 위축 등 실물경제 충격을 감안해 신중한 스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社說

“한국 공무원이다 살려달라”는 첩보 진짜 지웠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소각 사건과 함께 어선 귀순 북한청년 강제 복송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두 일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조직적으로 첩보를 ‘취사선택’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는지 날낱이 밝혀내게 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부인했지만 청와대 지시를 받은 이후 삭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정보 당국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 군에 구조를 요청했다는 감정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국정원이 공무원 이 씨는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생산했으나 박 당시 원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박 전 원장은 청와대 지침대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박 전 원장은 “문건을 삭제한 적도 없고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으며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탈북 청년 복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 2명이 동해 북한함계선(NLL)을 넘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문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며 판문점을 통해 안대와 결박 차림으로 강제 복송한 사건이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귀순 주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서둘러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책임자였던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정보 분석 자료를 들고 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월북이 아닌 표류’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뭔지, 보고서 삭제가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청와대 관계장관회의·귀순 주민 강제 송환·군사기밀 47

진실 왜곡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당해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인 복송 사건 조작 혐의 北 눈치 보며 기밀 취사선택했다면 파장 커져

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 탈북자 합동신문은 최소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당시 문 정부가 ‘하노이 노딜’(2019년 2월) 이후 남북대화 재가동에 올인 하던 때다.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과 헌법에 반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다.

군 당국도 서해 공무원 사살·소각 정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박 전 원장은 청와대 지침대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박 전 원장은 “문건을 삭제한 적도 없고

군 삭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국정원에 이어 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취사선택해 지운 게 아니냐는 것이 핵심 의혹이다. 지난 정권 국정원에서 대북 관련 자료가 삭제된 이유는 수사를 통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박서 두 전 원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사안은 엄중하다. 중대한 국가범죄다. 이런 사안일수록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규명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되려면 그래야 한다.

日 기사다 총리의 ‘주변국 중시’ 외교를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손 사제 산탄총에 맞아 사망했다.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한일 관계도 좋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도 좋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도 좋지 못했다.

아베 전 총리 피살 사망은 일본 국내 정치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태다. 그는 8년 9개월 동안 일본 총리를 지낸 역대 최장수 총리이자 일본 우익의 상징 인물이기 때문이다.

의고·안보에선 우익의 길을 걸었다. 한일 관계도 좋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강제성을 인정했지만 아베 집권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기술은 고노 담화와 정면대로 갔다. 2019년 7월에는 수출규제까지 강행하며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헌을 추진하려 했을 뿐 아니라 방위력 증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으로 일본 국민의 안보 의식이 전에 없이 높아진 지금을 개헌 적기

로 여기고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앞장서 추진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20년 9월 퇴임 후에도 집권 자민당 내 최고 파벌인 아베 파의 수장으로 ‘상왕’ 노릇을 해왔다. 그는 자신의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를 만드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퇴임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은 당장 10

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는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고민하기 바란다.

정국의 향배는 기사다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기사다 총리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비교적 중시하는 당내 ‘리버럴(자유주의)’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어 소신을 펼쳐가거나 ‘아베 유지를 받들겠다’는 명분으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장악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당내 온건파인 ‘기사다파’를 이끄는 현 총리가 자신의 색깔을 내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특히 한일-불확실성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리적·경제구조적 유사성이 있어 양국 협력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정부는 일본의 정국 급변을 예의주시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길 당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로 결성된 한일경제회의 등 민간영역 채널도 가동해 협력을 구하면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일-역사·지리적으로 뿔뿔이 뿔 수 없는 동반자임을 재인식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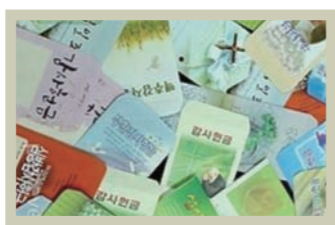
스카이&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빠져 헌금을 많이 해 집안이 파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량과 평화를 명분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생겨난 종교로 탈영한 가정이 파탄 나고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어떤 종교든 애초부터 이런 결과를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가톨릭의 ‘돈으로 은총을 살 수 있다’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총총으로 루터에 의해 생겨난 초기 개신교는 ‘헌금 설교’가 금기 중의 금기였다. 하지만 개신교의 소말리대 ‘땅 끝까지 전도가 완성된 오늘날 과연 개신교의 헌금 실패는 어떠한가. 어느 순간 개신교엔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설교 주제로 나서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해야 하는 ‘십일

헌금과 구원



조’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하기도 민망하다. 최근 포털에 글을 올린 한 기독교인은 “말기 암 환자인데 십일조 헌금과 구원 때문에 괴롭다”고 적었다. 십일조 생활 1년 이상 하면 ‘집사’ 직급 준다 고 했는데 소식이 없고 교회는 빛더미인데 답답한 것은 역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폭로했다.

답변을 쓴 다른 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태권도장을 겨우 운영하는 집사님이 재난지원금 600만원을 정부에서 받았는데 목사님이 (십일조인) 600만원을 이번 주일까지 내라고 하신다”면서 신앙

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개신교에 기반 한 신용 종교일수록 헌금에 집착한다. 전도라는 명목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교주와 가족의 품위 유지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천국인 우리나라는 성전 크기나 신도 수를 ‘교세’라는 이름으로 거론하기 때문에 외형을 중시한다.

A. J. 크로닌은 1940년대 집필한 ‘천국의 열쇠’에서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많이 있다. 우리가 이쪽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듯 이 새 신교사들은 다른 편의 문을 택했다. 이는 신교사들이 사탄의 사탄이다. 자 이리 들어오너라. 네가 그러도 부정하던 천국이 여기 있느니라”는 책 속 천국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울린다. 구원은 헌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조영진 필